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58
----------	------

발의연월일 : 2024. 10. 23.

발 의 자 : 이헌승 · 김선교 · 김도읍  
강선영 · 서일준 · 서지영  
김승수 · 박덕흠 · 고동진  
유영하 · 정성국 · 윤상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국가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158조(경비의 지출)는 “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시·도별로 고령시대(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22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p> <p>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p> <p>2.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p>
<u>&lt;신   설&gt;</u>	<p>제22조의3(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보상계약의 체결)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p>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  
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  
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  
· 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  
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  
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  
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  
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  
정할 수 있다.